

음성축협 시살처분 농가에 재해자금 지원



음성축협(조합장 조철희)은 지난 5월 30일 조합회의실에서 류근종 한국오리협회 음성군지부장을 통해 AI 피해농가 재해자금으로 모두 8천600만 원을 지원했다. 음성축협은 AI 발생으로 오리, 양계 살처분농가 최병호 외 39명의 조합원에게 축사 깔짚, 방역용품 및 축산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7천800만 원의 자재 지원금과 위로금 800만 원을 합쳐 모두 8천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라호관 이사, 정용인 음성축협 명동면 축산계장이 함께 했다.

조철희 조합장은 “금년 초에 발생한 AI로 음성군 내 가금농가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음성 축협은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조합원들이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재기에 필요한 축산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아울러 “전국 오리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음성지역에서 다시는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앞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축산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음성축협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2014. 06 .04]

음성, 닭·오리 사육 500m 이내 안 돼

음성군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음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지정 고시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음성군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한구역을 정하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지난 1월 6일 개정했다. 군은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을 공람 공고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지정 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제한구역은 조례 개정 전 3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되던 닭, 오리가 5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된다.

또 도시지역과 7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만 제한거리를 두었던 것을 병원, 노인요양시설, 기숙사, 마을 상수도 등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부터도 적정한 거리를 제한하도록 확대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 열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되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군 환경위생과에 도면을 비치해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 중도일보 최병수 기자 [2014. 06. 09]

AI 종료 임박, 오리 가격 폭등 조짐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르면 이번 주말(6.14)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AI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리 4백만 마리 이상이 죽어 오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으며 AI 종료 선언 이후 수요가 늘면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전라북도 고창군의 종오리농가에서 시작된 AI는 5월 18일 전남 담양의 종오리 농가에서 AI항체가 발견될 때까지 5개월 가까이 진행됐다. 마지막 AI가 발생한 시점부터 20일 전후에 종료가 선언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주말쯤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긴 기간에 오리 4백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통계청의 집계결과 지난 1분기 말을 기준으로 657만7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432만2천 마리(-40%) 줄었다. 오리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한국 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주를 기준으로 3kg 생체 오리 가격은 1만1,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6,700원보다 70% 가까이 뛰었으며 2kg 신선육도 1만3천원으로 지난해 8,200원보다 60% 가까이 올랐다.

문제는 AI 기간에 새끼오리 이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공급이 절대로 부족해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 이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I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단체여행 자제 등으로 침체됐던 오리소비가 AI 종료 선언 이후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공급이 달려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연계에서는 오리소비가 본격화되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오리알을 부화시켜 성체 오리가 될 때

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리가격 강세는 가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 노컷뉴스 [2014. 06. 10]

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1일 KRA(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AI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가금 사육농장이 밀집돼 있어 AI가 발생할 경우 영향이 큰 지역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 특별관리(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규정 신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관리 지구는 ▲철새도래지 중 최근 2년간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 읍·면·동 또는 이(里)지역 ▲현재까지 총 5회 AI 발생사례 중 2회 이상 발생한 읍·면·동 지역 ▲가금농가수가 5회 이상이고 사육마릿수가 50만수 이상이거나, 반경 1km 이내에 30만수 이상 사육하는 읍·면·동 또는 이 지역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금 집단 사육단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되면 가금농장의 방역시설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중 까다로운 관리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방역관리 지구에 대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존 가금농장의 타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AI 발생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는 오염지역, 500m~3km는 위험지역, 3~10km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역대도 앞으로는 지형·역학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방역대 명칭은 오염지역의 경우 집중보호지역으로, 위험지역은 보호지역으로, 경계지역은 예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들 방역대는 시·도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검역본부 담당관이 합동으로 위험도를 분석해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역대에서의 살처분은 발생농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집중보호 및 보호지역(종전 오염·위험지역)에서는 위험도 분석의 세부요소를 고려해 범위를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AI 발생농장이 아닌 인근 농가는 경우에 따라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방역대 내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도 개선해 보호지역(3km 이내)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이동을 제한하지만 출하일령에 이른 닭·오리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거친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출하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보호지역의 닭 알(식용란 및 종란) 및 예찰지역 오리 식용란은 방역 조치 완료 조건하에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 보상 체계도 개선해 살처분 보상금은 실제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소홀에 대한 책임은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친환경(유기·무항생제) 인증 농장의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한 지원은 실제가격(계약납품 가격 등)으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I 양성농가의 폐기사료 보상액도 현재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축산업 허가·등록제 미준수, 방역기준 및 방역시설 미흡, 방역 소홀로 인해 AI

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엔 보상금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방역의무를 부여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AI 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방역기관은 사육농가에만 소독 등을 강화하도록 독려·지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계열화사업자가 방역에 대한 책임을 계열농가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계열화사업자는 소속농가에 대해 정기적(연 2회 이상 등)으로 방역기준 및 세부 방역실시요령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방역 추진상황(방역실태 점검 결과 등) 및 계약농장 사육 현황 등을 방역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실태를 상시 점검해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AI 백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축산업 허가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체계 및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선임 대표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AI 원인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AI 원인규명과 방역은 선진 축산강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무슨 말 오갔나

공청회에서 소개된 농식품부의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리지구에 해당될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 닭·오리 사육농가 중 상당수는 소독시설을 확충하고 담장·울타리를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하는 등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부회장은 “관리지구로 설정된 지역의 농가는 닭·오리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관리지구에 있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AI가 직접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나 조기종식이 되기보다는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AI 발생에 대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한국오리협회장)은 “정부 산하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실시했지만 AI가 발생했다”며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 농민신문 김광동·최문희 기자 [2014. 06. 13]

강원 횡성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강원도가 횡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6월 16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방역협의회 화상회의를 열고 방역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AI 종식 때까지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철저히 할 것과 농가 담당 공무원 등을 활용, 임상 및 전화 예찰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사 입구의 발판 소독조 설치 및 2~3일 주기로 소독액 교체,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사람 출입 엄격 통제도 당부했다. 또 발생농장 기점으로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류 이동 제한과 차단방역 강화를 비롯해 가금류 사육농가 방문자제 및 상호 모임 금지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역대 내 15개소에 통제초소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6개 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며, 발생지 1개소, 3km 이내 위험지역 6개소, 경계지역 14개소 등 총 21개소로 확대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4일 횡성군의 한 거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돼 해당 농가의 거위 969마리와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에 있는 양계농가의 닭 20마리를 살처분했다. 강원지역은 지난 2월 원주시 호저면 섬강 일대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있지만, 농가에서 직접 AI가 발생해 살처분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최문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 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방역대 내에는 닭 199 농가, 칠면조 4농가 등 206농가에서 98만8천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AI 발생 이후 이동제한 명령과 함께 지역 전체 농가에 대해 긴급 전화예찰 등을 매일 실시하는 가운데 현재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경수 도 동물방역담당관은 “AI 발생 농가가 거위를 방목하는 곳이어서 야생조류에 의한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화예찰 결과 추가 발생 조짐은 없는 상태여서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농가별 소독, 축사 주변 생

석회 살포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전남 담양 오리농장 발병 이후 20일 만에 AI가 다시 나타나 6월 하순으로 예정했던 AI 종식 선언은 일러야 7월 말에 가능할 전망이다.

▶ 연합뉴스 [2014. 06. 16]

〈기고〉 축산가치 인식 제고 노력 절실



▲ 이상철 농업연구원

◆ 축산업에 대한 오해 불식 위해선

얼마 전 우리 축산업의 실태를 비판한 TV 방영물을 보았다. 핵심은 마블링이 잘 된 쇠고기란 것이 수입 사료를 많이 먹어서 생산돼 비싼 값으로 유통되고 있고, 가축사육두수가 분노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상태에 이르러 농촌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영내용의 심각성은 그동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모화, 고품질, 위생·안전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 왔던 우리 축산구조의 변천사에 대한 이해 없이 현재 안고 있는 과제만 집중 부각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한우고기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이 낮았고 수입 자유화에 따른 불안 심리로 2001년 한육우 두수가 140만 두로 떨어져 한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경제가 위협받는 처지에 있었다. 품질차별화가 유일한 대안 이었고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각종 정책과 기술을 집중 투입했다. 농가에서도 과거의 단기 속성 사육방식 대신 고급육 사육방식을 적용했다. 관련 전방산업도 위생·안전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급격히 높아 졌다. 이에 따라 산업이 일정부분 안정궤도에 진입한 듯 하다가 근래 반복되는 사료 값 상승, 연이은 FTA 체결로 인해 농가는 다시금 생업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 쇠고기 가격체계 소비자에 알려야

한우고기 가격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고급육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즉, 다소 비싼 가격에도 지불의사를 가진 소비자가 많아 등급 간에 경락가격이 차이 나는 것인데 마치 수요자 알권리를 위해 표시하는 등급제가 고급육 생산을 부추기는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주체도 한우 고급육이란 것은 단순히 사료를 배불리 먹여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송아지부터 출하 시까지 사양 단계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고 개량, 번식, 사양, 초음파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생산한 후 철저한 위생 및 이력관리를 거쳐 명품고기가 탄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이나 연구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도입 이전에 이해관계자와 인식을 공유하고 철저한 시뮬레이션, 시범 적용, 평가를

거친 다음 서서히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축분뇨 철저 관리...자원화 가치 홍보

가축분뇨는 관점에 따라서 유용한 농업자원이기도 하고 오염물질로 치부되고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분뇨관리 정책 방향은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오염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을 촉진했고, 개별농가의 분뇨처리 애로사항 해결 및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했다. 2012년에는 연간 최대 261만 톤에 달하던 해양배출 물량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퇴·액비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가 의무적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게끔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공공수역 오염 부하량이 큰 정화방류시설보다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인해 가시적인 경제사회적 성과를 얻고 있는데도 외부에서는 종종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와 업체가 그렇듯이 적절히 부숙시켜 비료규격에 적합한 퇴·액비를 생산하고 작물의 생육에 부합한 양을 살포하면 악취, 토양·수질 오염문제가 유발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부주의하게 덜 부숙된 퇴·액비를 생산하고 과다한 양을 살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축산 전체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역순환농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산지 작물의 특성에 맞는 퇴비와 액비를 제공하여 경종농가의 로컬푸드화를 지원하고 지역 내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해 보자. 유기·무항생제 축산에서

제조한 우수한 퇴·액비를 유기친환경 농업자재로 등록시켜 수요자에 대한 인식을 높여 보자.

가축분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에 걸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농축산부는 모든 액비 생산농가에 시비처방서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제도 시행이전에 농가 스스로 자율방제단과 같은 민간조직을 구성하여 분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떨까 한다. 분뇨배설량을 감축하는 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개량을 통해 지금보다 사료효율이 높은 계통을 구축하고, 단기적으로는 개체별 정밀사양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가식 지방을 최소화하면서 사료를 절약하는 기술이 조속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축산이 환경친화에 더욱 앞장서서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어 농촌이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공생공존의 정주공간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축산신문 [2014. 06. 18]

한·중 FTA 관세철폐 제외 당위성 <3> 오리고기

검역문제로 아직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철폐 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 중 하나

가 오리고기다.

세계 1위 오리고기 생산국 · 수출국인 중국

오리는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보이며 생산규모에 서만 2012년 기준 1조451억 원으로 국내 축산업 생산액의 6.5%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성장했다. 특히 전라도와 충북 지역에 전체 오리사육의 80%가 집중돼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현재 중국이 AI(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발생국으로 열처리 오리고기(훈제)를 제외한 냉동 · 신선냉장 오리고기 등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중국산 훈제오리는 2009년 357톤, 2010년 1748톤, 2011년 3232톤, 2012년 3602톤이 수입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세계 1위의 오리고기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생산량과 사육마릿수만 보더라도 2011년 기준 각각 264만 톤, 8억 마리로 우리나라보다 16배, 46배나 많다. 특히 기업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산업화된 시설에서 사육될 뿐만 아니라 품종(페킨)과 계통(SM3)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따라서 한 · 중 FTA로 중국산 오리에 대한 검역 해제와 관세철폐가 이뤄질 경우 중국산 오리고기와 부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1999년 중국산 냉동 오리고기 수입 급증으로 국내 오리시장의 25~30%를 중국산에 빼앗긴 바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 하고 있다.

여기에 주로 레스토랑이나 백화점을 중심으로 간 요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육(간)이나 떡갈비, 소시지 등 기타 부위 등도 가공업체들이 관세철폐 시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원료육 공급선을 중국으로 전환할 위험이 있다는 게 생산자단체와 축산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14. 06. 19]

한국오리협회 제23차 정기 대의원 총회

AI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오리업계가 AI장기화에 따라 지난 6월 18일야야 정기총회를 개최해 협회 살림살이를 확정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6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23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3년 결산안 및 2014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정기총회가 이처럼 늦어진 것은 AI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모임을 자제해 왔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특히 오리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오리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AI로 인해 종오리 살처분 두수가 많아 자칫 F1오리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며 등록되지 않은 불법 종오리 입식근절 및 수급조절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중FTA에 따른 오리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오리의무자조금 시행, 소비확대 방안 등 오리 산업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리자조금은 대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AI

등 대내외여건으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의 무자조금 도입 전까지는 소비홍보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임의자조금 형태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식이었던 부회장 겸 사육분과위원장은 충북도지회 정기헌 지회장을 선출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6. 23]

경기 안성 육용오리 농장서 또 AI 검출... 상시화 우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지난 6월 17일 전남 무안 육용농장서 발병한 이후 8일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벌써 4차례다. 종식되는 듯했던 AI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상시화·토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5일 경기도 안성 소재 농장의 육용오리에 대한 AI 검사결과, H5N8형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의 육용오리 2294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이동제한, 역학조사반 파견 등 관련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일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I H5N8형은 지난 5월 23일 전남 담양 오리농장 발병 이후 20일간 발생사례가 없어 정부는 6월 말 AI 종식을 공식선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14일 강원 횡성군 거위농장, 16일 대구 달성 거위농장, 17일 전남 무안 육용오리농장, 이날 경기 안성 오리농장 등 이달 들어 4차례나 발생하면서 'AI 종식 선언'은 무기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에 이어 6월에도 AI 발병이 잇따르면서 겨울철에 주로 발병했던 AI가 계절에 상관없이 발병하는 토착질병화, 상시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 철새들이 월동을 마쳤음에도 북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텃새화돼 AI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투데이 [2014. 06. 25]

오리산업, AI 타격 '심각'... 범업계 관심과 지원 필요



▲ 마광하 지회장(한국오리협회 전남도지회)

AI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리업계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있다. 특히 살처분 조치된 농가들은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50만수 이상의 종오리가 살처분 뒀에 따라 병아리 부족현상이 나

타나면서 언제 입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살처분 되지 않은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입식기간은 늘어나고 입식수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 만큼 농가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반기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것도 AI가 완전히 종식돼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루속히 AI를 종식시키고 오리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 축산신문 [2014. 06. 24]